



1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반도체 특화단지 “尹정부 응답하라”

광주시·전남도, 국힘 예산정책협서 공동 건의  
시·도의회도 오늘 ‘공약 이행’ 촉구 공동 성명  
산업부, 7월 선정결과 발표...전국 지자체 촉각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가 7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의지를 갖고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심사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이자 공약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통해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전남도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에서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공동 건의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날 오후 호남권 3개 광역 지자체 별로 순차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양 시·도는 각 지역 현안 건의와 함께, 당 차원의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이우호 예결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3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전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민선 8기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정하고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도는 특화단지 후보지인 첨단 1·3지구 일대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전·확장·편의·균형성을 두루 갖춘 최적지라는 게 광주·전남도의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용수와 전력 공급도 원활하다는 점도 장점이 다. 실제 유치지역 20km 이내 장성호와

담양호가 연결돼 있어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시·도의 공동 건의에 이어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도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는 15일 장성 소재 전남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앞서 도의회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전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지난 3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기관에 송부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 확대해야”

정다운 시의원, 회의 공개 등 위원회 혁신 재촉구

‘밀실 행정’, ‘깜깜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 공개를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은 14일 제31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성을 경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 ▲심의 쟁점 다양화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

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운영세탁·회의내용 ▲기술일변도 심의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 간 부결된 심의안건 0건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여러 논란이 있다”며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 알고 적시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국토계획법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 상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전국 타 광역시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경기자

## 제10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무등산·5·18 등 주제 가사문학 계승 기대  
시·산문 등 2개 부문...오는 8월31일 마감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0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한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임이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매일신문·광주시문인협회
- 응모부문 : ①시 ②산문(스토리텔링)
- 작품주제 : ①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야 하며 창의성이 중요함)
- 응모방법
  - 응모 대상 : 일반부/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산문(1인 1편, 분량 5천~6천자 안팎)
  - 응모기간 : 2023년 6월 19일~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9월 8일(금)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의 : 062-650-2079(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 기 타
  - 응모작품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 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 광주매일신문

## 尹 “文정부 의사결정 라인 철저히 조사”

태양광 비리 적발에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범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진수기자

태양광 비리 적발에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지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Today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자리	6편
중소, 고령자 채용 기피 뚜렷	13편
275억...이강인, PSG행 임박	16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개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가입기간을 축소(5년 → 3년)하고 납입금 적립비율을 조정[기업(1):인력(1):정부(1)]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기업) 제조업·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인력)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전 화) 1588-6259 (상담시간) 월~금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지원조건

(가입기간) 3년(36개월, 기간변경 불가) (부금납입) 청년근로자·중소기업·정부가 동일 비율(3년간 각 600만원)로 공동 적립

구분	적립금액	
납입금액	청년	600만원 (1년차) 14만원/월-고정
	기업	600만원 (2~3년차) 18만원/월-고정
정부	600만원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자동적립

(수령금액) 3년 1,800만원 + 복리이자

☛ 가입혜택

(기업)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 (월 33.3만원 임금상승 효과)